

특 집

4·13 총선과 노동운동의 대응

4·13 총선과 노동운동의 과제

정영태

•
민주노총 총선방침
양경규 정치위원장 인터뷰

•
부산 연제에서 쏘아올린
진보정치의 희망

이창우

•
정치개혁과 낙천낙선운동

조희연

4 · 13총선과 노동운동의 과제

정영태

연희대학교수 정치학

1. 4 13총선의 의미

한달 정도 있으면 제16대 국회를 구성할 선거가 있다. 이번 총선은 정당, 노동조합과 경제인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내의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인들의 단체, 그리고 외국 정부 등 우리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단체나 조직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선거가 될 것이며, 선거 과정에서 부각되는 대립축의 내용과 선거결과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총선 이후에도 그대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저지 또는 변형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이전의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① 우선,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실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정부는 IMF 등 외세의 요구에 따라 국가주도의 경제발전모델(즉 동아시아적 발전모델)을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로 개조하기

위해 산업구조는 물론 노동시장, 교육계, 정부기구, 정치구조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수천개의 중소기업체들이 도산하였으며, 백수십만명의 노동자나 봉급생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버렸고, 그나마 일자리를 지킬 수 있던 이들은 상용직에서 임시직 내지 일용직으로 전환되어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소득이 대폭 감소하였다.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좌절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길거리들 방랑했으며, 십수만의 아동과 이십수만의 노인들이 하루 한끼 이상 끼니를 때우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인, 노동자, 봉급생활자,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는 동안, 기존 정당 정치인들은 정치비용 축소를 위한 정치인 정수 조정, 지구당 사무실의 선거연락사무소로의 전환, 선거비용 대폭 감축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기보다는 부패 무능 정치인을 감싸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지역감정이나 명목적인 반공주의를 조장하거나 국회나 국정감사에서 욕설과 몸싸움까지 해댔다. 국회와 정치인들을 지칭하기 위해 '방탄국회', '식물국회', '날치기통과', '충성심 경쟁' 등이 널리 확산된 점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던 점은 바로 이러한 기존 정당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잘 말해준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부들이 거성 정치권의 1인1표제 유지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87년 6월항쟁에 버금가는 '제2의 시민혁명'으로까지 일컬어지는) 낙선 낙선 운동에 의해서 겨우 국회의원 정수 축소, 시민 사회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등과 같은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정당 정치인들은 '음모'라니 '유착'이니 하면서 이해하거나, 당내민주화는 외면한 채 공천물갈이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등 낙선낙선운동을 왜곡 악용하거나, 위헌소지가 있는 1인1표제를 고수하는 등 제법그릇 지키기에 열중함으로써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맹목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러나 부패하고 반노동자적이고 집단이기주의적인 정당 정치인들을 노동자와 중산층(또는 시민)의 힘으로 교체해야 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② 이번 총선은 지난 2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이 대폭 개정되어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단체가 대폭 확대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이다.

그 동안 금지되었던 노조와 시민 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천에서 투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어느 때보다 선거전이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첫째, 노동조합의 선거참여와 정치자금기부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지난 2

월초 노조의 정치자금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조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제한이 풀렸고, 따라서 이번 총선부터는 노조가 기존 정당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계후보나 친노조 정당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할 수 있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정치자금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후보자 초청 대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모든 시민 사회단체가 낙선운동을 포함한 거의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을 포함한 시민단체는 물론 전경련이나 경총 등 경제인단체, 의사회 약사회 등 이익단체들도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정치자금도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지난 2월의 법개정으로 노조와 경제인단체 등의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이 정당 후보지지와 정치자금기부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단체들이 조직의 구성원들로부터 선거방침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며, 동시에 기존 정당이나 후보가 이들 단체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 어느 선거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한 시민사회가 더욱 정치화될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은 외국인 투자가나 기업인이 국내에 직접 진출하여 한국의 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고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1998년 한해 동안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무려 7.1%를 차지하였다. 같은 해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총 88억 5천 2백만달러에 이르며, 경영권을 넘겨받는 기업인수 합병(M&A)형 직접투자가 53%를 차지하였다. 이후에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계속 늘어나 1999년 한해 동안만 155억달러(2,02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공장시설과 증자참여 등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에 의하면, 1998년말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다국적기업은 제조업체 399개사, 서비스업체 70개사로 모두 469개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들 외국인투자 제조업체 중 82%인 325개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세계해택이 주어지는 고도기술수반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체 중 32개가 은행금융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1998년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은 12억 405만주로 1997년 말에 비해 56%나 증가했으며, 1999년에는 더욱 늘어나 21억3688만주로 77.5%가 증가하였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은 1997년 9.1%, 1998년 10.4%, 1999년 12.3%로 높아졌으며, 외국인 보유주식의 시가

지난 2월 1일 열린 한국노동대의원대회, 이 자리에서 금융노련소속 대의원들은 민주노동당과 연합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총액도 1998년 말 25조 6334억원에서 1999년 말에는 74조 3571억원으로 3배로 늘어났다. 또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수가 50%를 넘어선 상장사는 쌍용제지, 쌍용정유, 하이트맥주, 삼성전자, 삼성화학, 삼성전관, 아남반도체,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 10여개사에 이르고, 외국인지분이 내국인 최대주주보다 많은 상장사는 하나은행, 한미은행 등 40여개사에 이른다. '제철보국'의 상징이었던 세계1위의 철강사인 포철도 40.77%의 주식을 소유한 외국투자자가 최대주주로 부상하였다. 외국인투자자나 기업이 제철, 반도체, 금융산업 등 한국경제의 핵심을 차지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열사간 부당지원, 노사관계 등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등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들 외국인투자자들은 조세감면이나 파업방지 등과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외국상공인 연합조직을 결성하고, 한국정부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지하철 파업 때 국내에 진출한 외국상사나 기업들, 또 투자를 고려중인 해외업체들은 "파업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어느 쪽도 승자가 될 수 없다"며 "경제회복의 시발점에 서있는 한국의 파업을 모든 노력을 불거쁨으로 만

들 수 있다"고 경고했는가 하면, 주한미상공회의소장인 제프리 존스는 "미국 측의 투자보류로 한국이 잃는 금전적 손해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우리 정부에 대해서 파업을 중단시키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어느 한 언론사에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기업들은 주한외국인단체(예, 주한미상공회의소 등)를 'DJ정권 이후 영향력이 가장 강화된 집단'으로 지목한 점은 '차화자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IMF 이후 높아진 외국기업의 위상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이엠에프 이후 외국기업이나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점차로 커져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자본가들의 조직인 전경련에서는 주한외국기업들의 회원가입을 받고 있다. 지난 4월초까지 한국3M, 볼보(Volvo)건설기계코리아, 한국카본블랙(Carbon Black), 한국코카콜라(Coca Cola) 등 모두 4개의 외국기업이 가입하였으며, 모토로라(Motorola)도 가입의사를 밝혀 놓은 상태이다. 전경련에서는 "연간 매출 500억원 이상인 외국기업들은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어서 외국기업 회원사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주한미상공회의소와 주한EU상공회의소 등 외국기업단체들의 가입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다. 대한

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자본가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에 외국기업과 정부는 한전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거나 국수주의적인 세력이 진출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저런 위협을 가하고 있다.¹⁾

이상에서 본 것을 요약하자면, 이번 선거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지속하려는 외국의 초국적 기업, 재벌, 김대중정권, 보수야당, 그리고 보수언론과²⁾ 이를 저지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노동자와 시민단체, 이들 간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2. 선거에서 예상되는 대립구도

방금 본 것처럼, 다가오는 총선은 새로이 개정된 선거법으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받은 노동조합, 시민단체, 자본가단체들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국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벌이는 한판 승부

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노동자와 빈급생활자의 생존과 경제적 번영,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초순까지 한정해서 본다면 선거에서의 쟁점 또는 대립구도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부패 무능 당내민주화의 문제와,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시민단체들이 예상치 않은 지역감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선거정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시민단체들의 낙천 낙선운동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기성정당

이번 총선에서 힘 겨루기를 하게 될 정치세력에는 (지금 후보자를 내어 총선에 참여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면) 국민회의에서 이름만 바꾼 새천년민주당, 지역감정과 맹목적인 반공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나라

1) 그러나, 김대중정권이나 야당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이러한 손상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작년에 드러난 미국계 다국적 은행인 시티뱅크에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들의 반응에서 나타났듯이, 이들은 외국인기업인들이 저지른 '험한' 잘못은 논감아 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기업들은 결코 노동자는 물론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 외국의 초국적기업과 김대중정권은 거의 모든 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보수야당은 외국의 초국적기업과 시장의 지분을 둘러싼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독점재벌의 이해관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자와 시민단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재벌은 이슈에 따라 김대중정권-외국의 초국적기업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보수야당과 독점재벌의 입장을 두둔하기도 한다.

당과 자민련(맹목적인 반공주의에 있어서는 후자가 앞선다), 지난 1월말에 창당한 민주노동당, 지난 2월초에 출범한 장기표의 청렴정치 국민연합(가칭), 그리고 무소속후보가 있다.³⁾

선거에 후보자를 낸 정치세력에 덧붙여, 이번 총선에는 낙천 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국회속기록 등의 분석을 통해 친자본의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지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자금을 제공 중단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자본가단체(외국인 자본가 포함) 등도 이번 총선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선 각 정치세력의 정책적 입장이나 노선에 입각하여 이번 총선에서 예상되는 대립구도를 보기로 하자. 올해부터는 빈부격차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새천년민주당은 사회경제정책의 측면에서는 외국의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신자유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물론 선거에서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정도의 민주주의(다두제)에 머무를 것이고, 대북 정책에서는 햇볕정책이 표상하는 타협주의적 포용노

선을 유지할 것이다.

반면 이회창에 의해 지도되는 한나라당과 김종필이 이끌고 있는 자민련은 사회경제정책에서는 민주당과 대부분 일치하면서도 한국의 독점제벌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대변하려고 할 것이며(따라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해가 되는 입장을 취할 것이며), 지역감정과 맹목적인 반공주의를 선동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입장과 대북 정책에서는 민주당보다 더 퇴행적이고 반동적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에 한성시킨다면,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은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에서는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과 기타 정당

민주노동당이 중요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사회경제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당내민주화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심화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 등 가장 진보적이다. 또한 대북 정책에서도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을 넘어서 군축문제와 주한미군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가장 진보적이다.

3) 한국노총은 원래 정책연합에 입각한 정당체제의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정당과 제휴할 것인가가 이 글을 작성한 2월초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직접 후보를 내지는 않지만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시민단체 가운데 참여 연대는 민주노동당과, 경실련은 청렴정치 국민연합과 상대적으로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타의 시민단체들은 집권당이나 보수야당의 입장에 가까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 기업인들의 경우 민주당과, 국내 기업인단체는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추측된다.⁴⁾

3.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방금 살펴본 각 정치 사회세력의 정책적 입장에 근거할 때, 이런 총선에서 형성될 수 있는 대립구도는 부패 무능 정치인의 퇴출을 둘러싼 대립구도, 출신지역을 축으로 하는 대립구도,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대립구도 등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지난 1월 시민단체들이 낙천 낙선운동을 주도하면서 맨 앞의 문제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정치권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존 정당들이 낙천 낙선운동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 활용함에 따라, 시민단체

들이 의도하지 않은 지역주의적 대립 축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물론, 어느 정당 정치인들도 드러내 놓고 지역감정을 선동하지는 않았지만, 지역구에 내려가서는 낙천 낙선운동을 지역감정 선동에 활용하였다.⁵⁾

그 결과, 선거에 다가가면서 주로 부각되는 대립은 부패 무능 정치인의 퇴출이 아니라 지역감정을 축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인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병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이슈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⁶⁾

왜 그럴까? 그것은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을 주도해야 할 노조의 내부단결력도 약하고 미조직노동자 봉급생활자에 대한 헤게모니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총선이 끝나자마자 한전의 해외매각 등 그 동안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느라고 김대중정권이 미뤄왔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병폐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도록, 그래

4) 물론 국내 기업인집단(특히 독점재벌)은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여권의 갈등관계에 놓여 있으나, 대북 정책에서는 민주당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5) 영호남과 충청도 지방에서 기존 정당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선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들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약하기 때문이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지역주민들이 정치나 정치인에 대한 이중적인 의식(즉, 정치일반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지역구 의원을 지지하는 것이나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하여 사고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저역수준의 시민 사회단체의 실성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세 서울중심의 언론에 의존한 운동을 전개해 왔기 때문이다.

6) 적어도 이 글을 마무리짓던 2월 10일경까지는 그랬다. 당시 필자는 시민단체들이 낙천 낙선운동이 선거정착을 지배하는 한 이러한 추세를 지속되리라 예측하였다.

서 신자유주의-반신자유주의의 대립 축이 중심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한다.

① 노조운동의 정치적 단결이 필요하다

우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정치적 단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대한 자신들의 계급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적을 초월하여 단결하고, 보수정당 정치인들도 노동자와 진보세력과 대립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면 3당 합당도 하고 지역주의연합도 하는데, 왜 우리 노동자들은 진짜 '직'은 따로 있는데 과거의 실수나 실책 또는 조직의 이익에 집착하여 서로 경쟁하고 분열되어야 하는가.

자본주의, 그것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에 비해 구조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와 단사(單社)노조 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있거나 '전투적' 이니 '개량' 이니 하면서 대립하여 분열되지만 한다면⁷⁾, 결국 자본가계급과 그 정치적 대리인들에게 좋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도 없다. 일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자 내부적으로 강고한 단결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조간부부터 지역감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불편했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다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96·97년 총파업과 그 이후 가꿈 이루어졌던 연대와 협력의 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정치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의 선거결과에 집착해서, 그것도 기존 정당 정치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면, 후보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과 일반노동자나 지역주민의 소외를 초래하고 나아가 선거 이후 후유증도 대단히 클 것이다. 일반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를 그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식(예, 입투와 결합하여 대중들이 직접 결정하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밀집지역에서는 가능하면 노동자후보를 내세우고 조직노동자는 물론 미조직노동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가 소수인 지역의 노조는 친노동자정당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신자유주의와 부패 무능정치에 반대하는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낙선운동이나 부정선거감시를 전개하여 노동조합의 이미지를 제고

7) 어떤 입장이나 노선을 취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거나 무조건 무시지는 물론 아니다. 입장차이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집단에서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차이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의 문제다.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전략지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노동자밀집지역 등 몇개의 전략지역을 선정하여 중앙과 주변지역의 노조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자밀집 지역에서 평상시 노동운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의 노동자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거나 (노동자가 소수인 지역에서도) 지역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가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그를 후보자로 내세울

필요가 있으며, 중앙이나 주변지역의 노조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⁸⁾

물론, 노동자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조합원과 당원, 나아가 지역주민들까지도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대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노동자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방식을 통하지 않으면 노동자 후보가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그래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8) 정당명부제를 포함하는 1인2표제가 아닌 원래의 소선거구 1인1표제에 의해 이번 총선을 치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서 혹시라도 가능한 많은 후보를 내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자칫 함량미달인 후보자를 내서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고, 한정된 재정·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득표에도 전략지역에 집중하는 방식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